

## 시론



김형준

- 현) 명지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정치학)
-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 한국정치학회 이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 위원회 위원
- 한국선거학회 회장

## 청문회 제도를 정상화시키고 ‘위선 진보’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조국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은 한국 사회에 많은 성찰과 과제를 남겼다. 무엇보다 인사 청문회 제도에 대한 고찰이다. 이 제도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과 함께 인사청문회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의 큰 어려움이 된다.”고 했다. 여당도 인사 청문회 제도가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 났다면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생각과 주장은 인사 청문회 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제도가 아니라 운영이 문제다. 인사 청문회의 원조 격인 미국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분명해진다.

생산적인 청문회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혹독한 사전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에 게만 청문회 참석 자격을 줘야 한다. 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후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게 되어 있다. 미국은 시기와 상관없이 여여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열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이후 정치권과 여론의 반응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직 후보자에 대한 찬·반 여론이 형성되고, 대통령은 이를 감안, 상원에 인준요청서를 발송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공직 후보자에게 치명적인 의혹이나 위법 행위가 발생되면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 시절 김바 우드와 조우 베어드가 법무장관에 지명됐다가 불법 채류자를 가정부로 고용한 사실이 알려져 사퇴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가정부 고용 이유로 버나드 케릭 전 뉴욕 경찰청장의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을 철회했다. 여하튼 미국에서는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자는 결코 청문회 장에 들어 갈 수 없다. 반대로 개인 신상에 대한 조사는 사전에 상당히 이뤄졌기 때문에 청문회가 열리면 예외 없이 정책 청문회가 된다.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정책 및 이념 검증에 치중한다.

**둘째**,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검증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가령, 미국의 경우 연방 수사국(FBI)의 신원조화와 국세청(IRS)의 세무조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검토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대통령에게 직보한다. 이들 기관들은 후보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개인 및 가족의 배경은 물론 직업, 교육, 세금 납부 기록, 금융거래, 전과, 소송, 교통범칙금 등 경범죄 위반 기록까지 살살이 뒤진다. 이런 상호 검증 경쟁 시스템을 만들고 청와대 검증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면 무능하고 비리에 연루된 후보는 지명되기 어려워진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청와대는 도대체 조국에 대해 무엇을 검증했는지 궁금하다.

**셋째**, 후보자에 대한 인준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2단계 인준 투표를 실시한다. 한국에서는 국회 인사 청문회이후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

난 9월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6명이 장관 및 정부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이번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치지 않은 장관급 인사의 수는 22명으로 늘었다. 한국 인사 청문회가 ‘무늬만 청문회’ ‘하나마나한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넷째**, 미국의 경우 인사청문회에 앞선 사전 검증 단계에서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한국에서는 이런 처벌 규정이 없다. 자유한국당 송인석 의원은 인사 청문 후보자가 위증을 할 경우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국 장관 임명 후 가장 먼저 나온 청문회법 개정안이다.

**다섯째**, 미국은 여야가 함께 후보를 검증하는 전통을 지킨다. 가령, 2017년 2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앤드루 퍼즈더 초대 노동 장관 내정자가 사퇴했다. 노동법과 이민자 고용 등을 관장해야 하는 노동 장관 내정자가 불법으로 인력을 고용한 것이어서 문제가 됐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4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이 인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 오히려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한국처럼, 여당의원들이 공직 후보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물타기’, ‘감싸기’에 급급할 경우, 효율적인 청문회는 불가능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인 민주당은 청문회전 지명 철회(3건) 및 사퇴(2건), 청문회 후 사퇴(6건) 및 지명 철회(1건) 등 총 12명의 총리 및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켰다. 민주당이 그 때 그 기준으로 조국 후보를 검증했는지 자문해봐라. 비정상적인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청문회 제도 개선 이외에 우리는 ‘회오리 정치’에서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1950년대 미국 외교관 출신인 그레고리 헨더슨은 한국 정치를 빗대 “한번 바람이 일면 강한 구심력

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마치 회오리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9일부터 한국에는 오직 조국만이 있었다. 초대형 태풍이 몰아쳐도, 경제가 흔들려도, 북한이 수차례 미사일을 쏘도 조국 의혹에 온 나라가 휘말려 들어갔다. 일종의 ‘극단적인 쓸림 현상’이 나타났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또 나올 지경이다. 그런데 “조국(曹國)이 조국(祖國)을 살렸다.”는 역설이 회자되고 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위선진보’에 속지 않고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 사태는 ‘분노와 축복의 양면성’이 있다. 이제 증오와 분노가 관을 치는 감성적 극단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 협력이 공존하는 합의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에 대한 제도화도 필요하다. 당·정·청은 조국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을 정치 검찰이라고 공격했다. 국무총리는 ‘검찰이 정치를 하겠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압수 수색은 내란음모 수준’, 민주당 내부에서는 ‘인사권 저항’ 등의 격한 반응도 나왔다. 이런 발언들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고 법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의 영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검찰을 겁박하고 수사를 방해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여권이 원하는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 잘 드러났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정권의 개가 되어 정의에 눈감고 정권 입맛에 맞는 편파 수사를 하는 검찰’을 만들려는 음모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이미 국회로 넘어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남자’ 조국이 아니라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의 책임자로 생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의 책임자인데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조 장관을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주장에 국민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추석 전 SBS·칸타코리아 조사 결과(9월 9일-11일), 조국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정당한 수사다.”라는 응답이 60.2%, ‘무리한 정치개입’이라는 답변은 35.6%였다. 더구나,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의 책임자여서 잘 될 것’이라는 응답은 겨우 18.9%에 불과했다. 반면, ‘조 장관에게 흠이 많아서 잘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5.9%, ‘입법사항인데 야당 반발이 커서 잘 안 될 것’은 19.9%였다. 국민 10명중 6명(55.8%) 정도가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국 사수론자들은 여기서 밀리면 정권이 흔들리고 사법 개혁은 물 건너가며 친문 핵심 지지층이 이탈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판이고 착각이다. 오히려 위선과 거짓, 그리고 타락한 강남좌파인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는 최악의 선택이다. 촛불 정신의 바탕위에 세워진 현 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제1야당 대표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삭발을 하면서 조국 퇴진 투쟁의 강도를 높였다. 대학 소속 교수 2000여명이 “조국 임명으로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며 조국 장관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 수치는 지난 2016년 11월 최순실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연구자 시국 선언에 참여한 2234명에 육박하는 규모다. 단언컨대, 문 대통령의 오기와 민주당의 오판은 진보 몰락의 시작을 알리고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 뿐이다. 따라서, ‘음참조국’(泣斬曹國)은 ‘문재인의 운명’이다.